

Newsletter

July 2026

Contents

Audit

-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
- 금융감독원, 최근 회계심사·감리 주요지적사례(10건)공개
- '25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Accounting

- '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 '26년 비상장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27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 '26년 6월 질의회신 요약 등 공개
- '25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 결과

ESG

- 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Tax

- 국세청 주요 성과 및 핵심 추진 과제 발표
- (채납)납부지연가산세 월단위 방식으로 개정
- 교환율 피해기업 등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Insight

- 공인회계사가 본 '26년 2,3분기 경기실사지수 (CPA BSI)
- 한국개발연구원(KDI), '26년 한국경제 성장률 2.5% 경제 전망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20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동 개정안은 공포일(5.26일)부터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1.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 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 지급
 - ② 관계기관 간 신고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
 - ③ 신고자가 가담자인 경우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 ④ 포상금 선지급 제도 운영
 - ⑤ 몰수·추징된 원금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
2. 회계부정 제재 강화
 - ① 회계부정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가중
 - ② 회계부정 실질책임자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더 알아보기 →](#)

금융감독원, 최근 회계심사·감리 주요지적사례(10건)공개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유의하여 결산·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11년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을 공개해 오고 있고, 이번에 '25년 하반기 지적사례(10건), 유형별로는 매출, 매출원가와 기타자산, 부채 각 3건, 종속, 관계기업투자주식과 주식 미기재 등 기타 지적사항 각 2건을 공개하였습니다.

■ 주요 지적 사례

[사례1]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회사는 개인방송용역을 주선해 주는 대리인이었음에도 수수료(순액)가 아닌 광고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총액)를 수익으로 잘못 인식함

[사례2] 도급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

회사는 거액의 공사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 변경에 따른 효과를 일부만 당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연함

[사례3] 투자자간 약정 주식 미기재

투자자간 계약에 따라 의무조항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매수청구권이 우발부채에 해당함에도 회사는 이를 주석에 공시하지 않음

[더 알아보기 →](#)

'25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의 '25회계연도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분석하고 정보이용자와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 감사의견 분석

(재무제표 감사의견)

-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비율은 97.6%(2,637사)로 전기와 유사(97.5%, 2,615사)한 수준
- '비적정'의견은 2.4%(65사)로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초 재무제표 잔액, 자금거래의 적정성 등과 관련된 감사범위 제한이 주된 사유

(내부회계 감사의견)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인 비율은 98.6%(1,629사)로 전기(98.0%, 1,582사)보다 다소 개선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1.4%(24사)이며, 감독 강화와 기업의 개선노력 지속 등으로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전기(33사) 대비 9사 감소

■ 유의사항

(정보이용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더라도, 회사에 대한 중요 정보인 계속기업 불확실성의 기재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의 비적정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및 외부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보고 기준의 규정화, 회계기준 제·개정(K-IFRS 제1118호('27년 시행예정) 등),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제도 변경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금융감독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재무제표가 공시될 수 있도록 매년 6월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는 ① 국외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②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의 적정성, ③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④ 총당부채의 인식, 측정과 우발부채 공시이며, 금융감독원은 ‘27년 중 동 회계이슈에 대한 중점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알아보기 →](#)

‘26년 비상장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27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6월 비상장회사에 대한 다음 사업연도에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점점검 4가지 회계이슈는 ① 장기공사계약(수주산업) 수익인식 적정성, ②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③ 총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 적정성, ④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적정성이며, 회사 및 감사인은 해당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6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알아보기 →](#)

‘26년 6월 신속 질의회신 요약 공개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의 일관되고 원활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질의회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K-IFRS 신속 질의회신 9건, 일반기업회계기준 신속 질의회신 1건).

[더 알아보기 ① →](#)

[더 알아보기 ② →](#)

‘25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 결과

금융감독원이 ‘25년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제재현황 등 투자자 관심이 높은 중요 정보가 형식적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재무사항 점검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현황, 핵심감사사항 등 외부감사 관련 주요 내용 및 회계감사인 변경사유 등을 미흡하게 기재하거나 기재 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 비재무사항의 경우, 개정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의무가 도입되었음에도 일부기업은 “추후검토예정” 등 원론적 수준의 계획만 기재하거나, 취득·처분 이행 현황을 누락하는 등 투자자에게 필요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제재조치 등 기업가치와 리스크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점검결과를 개별회사에 통보하여 각 회사가 미흡한 공시를 보완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미흡사례와 작성시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전파할 계획입니다.

[더 알아보기 →](#)

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정부는 ESG 공시 로드맵 초안 발표('26.2.25) 후 공개 의견 수렴을 통해 '26.7.8 「지속 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공시시기 및 대상: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 '29년 5조원 이상 코스피상장사 공시 의무화
 - '28~'29년 공시상황을 평가하여 '30년 2조원까지 확대 검토
 -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매출이 연결기준으로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 면제
- 공시채널 및 면책: '28년(FY27)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
 - 예측, 추정정보 및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대한 제도적 면책 및 도입초기 3년 한시 면책 병행
- 제3자 인증: 공시 시행 2년 후부터 제3자 인증 의무화
 - 세부제도는 자본시장법령 개정과정에서 구체화 예정
- 스코프3 시행: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산출 인프라 구축 후 '31년부터 공시 시작(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

[더 알아보기 →](#)

국세청 주요 성과 및 핵심 추진 과제 발표

국세청은 '26.7.13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주요 성과와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 조세 정의 구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근절, 물가상승 조장 탈세 차단, 비정상적 부동산 투기 탈세 엄단/체납관리단 신설 및 재산 추적조사 강화, 탈세자 해외 은닉재산 환수
- 선제적 적극적 세정지원: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정기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중점 검증항목 사전공개) 및 국민 중심의 합리적 세법해석, 납기연장과 조기환급, 정기 세무조사 유예, 간이과세 배제기준 정비 등

핵심 추진과제

-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27년 본격 시행을 위해 통합징수 관련 법률로 일원화 추진,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통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체납자별 DB 구축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
- 체납관리 혁신
- 조세정의 확립: 물가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철저 조사, 법인자금 사적유용행위 적발 추진. 부동산 탈세로 인한 탈루소득 환수, 고액 상습체납자 추적 징수 등 시행
- 포용적 세정 지원:
- 국세행정 AI 대전환: K-AI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새로운 AI서비스(AI전화상담, 홈택스 AI검색, AI챗봇 신고 안내) 제공을 시작으로 '27년에 납세서비스 혁신(AI 전자신고, AI세금 컨설턴트), 공정과세 강화(AI 탈세 적발, AI 체납관리), 세정 효율화(AI 민원 로봇, AI 업무지원) 등 추진

[더 알아보기 →](#)

(체납)납부지연가산세 월 단위 방식으로 개정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26.7.1부터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일까지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현행 일 단위 산출방식에서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마다 산출하는 방식으로 체납이후 산출단위를 변경 시행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추진배경

체납 이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1일 단위로 직접 계산하여 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 제고

주요내용

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이 일(日) 단위 산출에서 월(月) 단위 산출로 변경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기존-변경 비교

기	존	법정납부기한 고지일 지정납부기한 1일당 0.0022% X 1일(日)당 0.0022%
변	경	(상동) X ● 1월(月)당 0.67% ●

기대효과

가산세 산출방식의 간소화로 납세 편의 제고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더 알아보기 →](#)

고환율 피해기업 등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26.7.2에 고환율 피해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예정신고·부과)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6.9.28. 까지(2개월) 연장하였음을 공고하였습니다.

- 고환율 피해기업:
(개인) '25년 매출액 5억원 이상, 수출비중 50% 이상
(법인) '25년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창업초기 청년사업자: '24년 이후 개업 청년사업자(91~06년생 대표자)로 '25년 매출액 10억 이하 (부동산 임대업 제외)
- 매출 급감 소상공인: '25년 매출액 10억원 이하이고 '25년 2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50% 이상 감소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제외)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및 예정부과대상자 중 부동산임대업 제외한 전체

[더 알아보기 →](#)

공인회계사가 본 '26년 2,3분기 경기실사지수 (CPA BSI)

회계정책연구원은 공인회계사 대상 설문을 기반으로 한 '26년 2분기 CPA 경기실사지수(CPA BSI)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2분기 BSI(현황): 115 (전분기 대비 3p 하락, 경기 확장 국면 유지)
- 3분기 BSI(전망): 115 (경기에 대한 낙관론은 소폭 조정)
- 경기 개선의 주요 원인
 - 고부가치 반도체 수출 호조
 - 설비투자 증가
 - AI 및 반도체 수요 독점에 기반한 수출 모멘텀
- 산업별 현황 BSI
 - 전자(161), 조선(138) 등은 경기회복을 넘어 뚜렷한 경기 확장 또는 초호황기 진입
 - 제약·바이오(92), 섬유·의류(92), 건설(88), 식음료(95), 철강(95)은 장기부진 지속
 - 3분기 전망에서는 철강(109), 섬유·의류(108), 제약·바이오(107), 식음료(100) 등이 개선 전망
- 향후 경제에 영향을 줄 변수
 - 글로벌 경기 흐름, 원자재 가격 및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갈등, 정부 정책 변화 등
- 리스크 요인
 -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 성장 동력과 하방 리스크가 공존

[더 알아보기 →](#)

한국개발연구원(KDI), '26년 한국경제 성장률 2.5% 경제 전망

KDI는 최근 발표에서 '26년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세와 내수 개선세로 2.5% 정도 성장한 후, '27년도 1.7% 수준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주요 전망 수치
 - 실질 GDP +2.5%, 민간소비 +2.2%, 설비투자 +3.3% 등 증가
 - 수출 증가율 4.6%,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 2.7%/ 취업자 수 증가 17만 명
- 전망 배경
 - 반도체 수출 호조세와 내수 개선세로 '26년 2.5% 성장 전망
 - 민간소비는 소득 개선과 정부 지원 정책에 힘입어 회복세 예상
 - 설비투자는 반도체 호조세에 따른 높은 투자 수요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 예상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호황과 내수 확대로 성장세 확대
 - 내수는 소득 여건 개선으로 회복세를 보이나, 중동 전쟁으로 하방 위험 확대
 -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에도 반도체 경기 호조로 높은 증가세
- 전망의 위험 요인
 - 반도체 공급 능력이 빠르게 확충되는 경우 경제성장세 확대 가능성
 - 중동 전쟁 격화·장기화 시 원자재 수급 차질 및 생산 비용 상승 가능성

[더 알아보기 →](#)

Contact us

Grant Thornton 대주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3 (대치동, 동하빌딩 2층)

Tel 02.569.0181 | **Fax** 02.569.0367

Email rfp@kr.gt.com

Grant Thornton 대주회계법인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시에는 Grant Thornton 대주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에게 연락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6 Grant Thornton Daejoo.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Daejoo is a member firm of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